

산촌마을 귀농·귀촌인 정착 동기와 생활만족 요인 분석

김성학 · 서정원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복지연구과

An Analysis of Settlement Motivation and Life Satisfaction of Return Farmers On Mountain Village

Kim, Seong-Hak · Seo, Jeong-Weon

Div. Forest Recreation & Culture, Korea Forest Research Institute

ABSTRACT : This study analyzed settlement motivation, life satisfaction factors, policy requirement targeting return farmers on mountain village. 8 target villages where return farmers live at least 10 people were selected according as cooperation of the local governments through literature by considering the area of the whole country. The return farmers in target villages were conducted a face to face survey with village headman's pre-coordination from February to September 2013. A total of 94 surveys were performed and 87 copies were used in the analysis.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most important factor influenced the decision to be a return farmer was "my family health(3.97)". The correlat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examine factors related with satisfaction of "return farmer life in general". The result showed that "change of physical health" was the most important correlativity with 0.544 correlation coefficient and 0.05 significant level and "family relationship" was followed with 0.424 correlation coefficient and 0.05 significant level. According to the "important factor for the successful return-farmer life", 42.7% of respondents chose "harmonious relationships with local residents" and "stable source of income" was chosen by 29.3% of residents. A questionnaire for the analysis of policy requirements showed that "education system related Forestry(Agriculture)" was the highest demand with 4.00 points. The result can be used as a basis for establishing policies with activation of mountain villages to attract to constantly increasing population of return farmers.

Key words : Mountain Eco-Village, Return to Rural, Mountain Village Settlement, Mountain Village Regeneration

1. 서 론

우리나라의 총 인구 중 약 14.6%(721만명 수준)를 차지하는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은퇴가 시작되고 농촌 생활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직접 농사를 짓는 귀농과 농촌에 거처를 마련하고 사는 귀촌은 증가되고 있다(김철규 등, 2011; 오수호, 2013).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는 일본의 단카이세대¹⁾라고 불리는 베이비붐 세대보다도 약 30만명이 많은 규모로 향후 새로운 실버문화를 탄생시킬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귀농·귀촌 현상은 실질적으로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1차

베이비붐 세대의 정년퇴직과 IMF 외환위기를 맞으면서 급속히 증가되어 왔다(박공주, 2006). 이 시기의 귀농·귀촌은 도시에서의 삶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농촌으로의 이주 현상을 가져왔다고 볼 수 있고 2000년대 이후의 귀농·귀촌의 양상은 보다 삶의 질에 가치를 두는 쪽으로 변화되고 있다(강대구, 2006).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방향에서의 귀농·귀촌 동기 변화는 정착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요소들 중 특히 삶의 터전이 되는 곳에서의 자연환경에 대한 가치의 고려는 높아질 것이다(이재민, 2012). 따라서 귀농·귀촌을 위한 정착지 선택에 농촌마을 중 자연환경이 우수한 곳 더 나아가서는 농촌보다는 자연환경 여건이 우수한 산촌의 가치가 보다 중대될 것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귀농·귀촌의 양상 변화는 정책적인 부분에서도 다양한 변화를 가

Corresponding author : Seo, Jeong-Weon

Tel : 02-961-2805

E-mail : knight01@forest.go.kr

저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도하고 있는 귀농·귀촌에 관련된 국가 정책은 2009년 귀농·귀촌 종합대책을 수립한 이후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2012년에 들어서는 핵심 3대 정책 과제로 FTA에 대응한 농어업 경쟁력확보, 농업개혁과 농축산물 수급안정, 귀농·귀촌 활성화를 제시하고 있다. 현재의 정책 방향은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농산어촌지역에 인구를 유입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에서의 귀농·귀촌을 활성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전반적으로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 가시적인 성과를 논의하기에는 아직까지 진행중인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귀농·귀촌 이후 정착에 실패하고 도시로 유턴하는 사례들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원인 분석이 보다 철저하게 규명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의 도입이 증가하고 있는 귀농·귀촌 인구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1970년대 이후 꾸준히 감소세에 있는 산촌의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된 다양한 마을개발사업에서의 환경개선, 소득 증대를 위한 시설투자, 소득사업 등은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에는 한계를 보여 왔다. 이러한 인구 감소 문제는 마을개발사업의 실질적 효과를 떨어뜨리는 핵심적인 난제로 대두되어 왔다. 최근 귀농·귀촌이라는 형태로 도시에서의 사회적 경험을 갖고 있는 다양한 계층의 산촌유입이 지속가능한 산촌의 여건에 있어서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직면해 있는 산촌마을 인구감소 문제 해결의 방안으로서의 귀농·귀촌 활성화를 목적으로 산촌에 정착한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정착 동기와 생활만족요인에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II. 이론적 고찰

1. 관련 선행 연구 고찰

우리나라 귀농·귀촌에 관련한 연구는 1990년대 중반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꾸준히 연구가 진행되어 오고 있다.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도시민의 귀농·귀촌 동기 및 유형에 관한 연구가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가장 많은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공간적 유형을 구분하여 산촌마을에 정착한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귀농·귀촌 유형과 동기를 구체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미진한 상황이며 대체적으로 사회적 관점에서 귀농·귀촌 유형과 동기를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우

중현, 1997; 유정규, 1998; 이재철과 이도선, 2006; 조창완 등, 2007).

귀농·귀촌과 관련된 선행 연구의 세부 분야를 살펴보면 앞에서 제시한 귀농·귀촌의 동기 및 유형에 관련한 연구 분야와 더불어 귀농·귀촌의 정착과정에 관련한 연구, 귀농·귀촌 생활 만족도에 관련한 연구 등이 본 연구의 흐름 및 내용과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먼저 귀농·귀촌의 동기 및 유형에 관련한 연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중현(1997)은 귀농·귀촌 동기가 1980년대 이전과는 달리 1990년대 이후로 넘어오면서 경제적 수익의 목적이 주 동기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제시하였고, 유정규(1998)는 20~30대와 50세 이상의 분류를 통해 귀농·귀촌 동기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을 규명하였다. 이재철과 이도선(2006)은 경상북도 일부지역의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전원생활 및 건강을 위해’ 귀농·귀촌을 결심한 사례가 가장 많음을 밝혀냈고 조창완 등(2007)도 전남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경제적 이유’와 ‘건강목적’이 귀농·귀촌의 동기에 가장 큰 결심 요인인 것으로 도출하였다.

귀농·귀촌 정착과정에 관한 연구는 도시민들이 영농활동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로 정착하는 과정에 관한 연구가 주로 수행되었다. 구본석(1999)은 귀농·귀촌지역에서의 성공적인 영농정착을 위해 정착자금 지원 및 귀농 정보 제공을 위한 네트워크 체계의 중요성을 밝혔고, 서규선과 변재면(2000)은 영농정착을 위해서는 정책적인 교육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고성준(2008)은 귀농·귀촌 이전 농촌생활체험이 성공적인 귀농정착을 위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한편 귀농·귀촌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는 1990년대 후반에 일부 연구가 수행되었고 2000년 초반에는 미진한 수준을 보이다가 2000년대 후반에 들어서며 주로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귀농·귀촌 후 삶에 대한 만족 내용을 다루고 있다. 박공주 등(2006)은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연령, 성별, 건강상태, 교육수준, 경제상태, 가족형태 등으로 규명한 바가 있고, 이상호(2008)는 귀농지역의 인프라에 대한 정보 제공과 다양한 정착프로그램 지원이 귀농·귀촌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킨다는 것을 제시한 바가 있다. 산촌지역인 강원도 영월의 귀농인을 대상으로 한 박은경(2008)의 연구에서는 주변경관의 수려함이 정주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밝혔고, 주거 및 농촌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규명한 바가 있다.

선행 연구들을 통해 살펴볼 때 한정된 지역이 아닌 정주환경의 유형적 분류가 다른 다양한 지역의 조사를 통해 보다 객관적으로 정착 동기와 생활만족 요인을 제

시하는 연구는 보다 객관화된 측면에서의 연구 결과 제시에는 한계가 따를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전국의 다양한 산촌마을에 정착하여 생활하고 있는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하는 본 연구는 기존 연구가 가지고 있던 한계를 개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독창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2. 귀농·귀촌 정책 고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증가하는 귀농 동향에 준비하여 정부는 이전부터 있었던 귀농정책을 정비하여 2009년 ‘귀농·귀촌 종합대책’을 수립하였고 이후 중앙정부, 민간조직, 지자체가 연계하여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추진중인 귀농·귀촌 지원에 관련한 역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앙정부가 조기퇴직 및 은퇴 등으로 새로운 직업 또는 정주환경을 찾는 도시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농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타 산업 경험인력 유입을 유도하여 농·산업 내부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에서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Table 1 참조). 지자체의 경우에는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춰 중앙정부 예산과 지자체의 별도의 조례를 만들고 예산 확보를 통해 귀농인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정책 실행을 담당하고 있다(Table 2 참조). 민간단체는 주로 중앙정부와 연계되어 교육과 컨설팅 지원 등에 관련된 분야에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Table 3 참조).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면,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각 주체별 노력은 농촌지역 관점에서 주민확보에 도움을 주며, 문화·관광·서비스 분야의 활력을 증진하고자 귀농을 지원하는 방향에서 정책이 수립되고 있으며, 귀농정책의 일관성 및 지속성 확보와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을 확산시키고 있는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귀농·귀촌 정책을 살펴보면, 정책의 수혜 대상은 농촌 중심의 귀농자이며 귀촌에 대한 정책 지원은 미비하며 귀농 중심의 지원 정책이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농촌 마을이 아닌 산촌마을은 상대적으로 우선 순위에서 배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중앙정부가 수립하고 있는 정책이 귀농인에 대한 정책 지원 내용에서 귀농 동기나 유형과는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맞춤형 지원이라는 측면에서는 미비한 상황이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각 지자체 특징에 부합하는 귀농인 지원 조례 및 별도의 정책을 마련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정책적 흐름과 내용을 통해 산촌지역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리해보면 다음의 2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정책적 측면에서 농촌지역 뿐만

아니라 산촌지역의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서는 귀농인의 주 지원 범위를 전통적 농업생산에 기여시키기 위한 방향이 아닌 임업생산을 포함하는 더욱 다양한 형태의 생산 활동을 지원 범위에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로 귀농 교육 또한 현재 농업기술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귀농·귀촌 실패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지역사회 적응 문제(고성준, 2008)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농업생산 중심의 교육 뿐만 아니라 지역의 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고유의 지역 문화 및 지역 이해 등의 교육 또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Table 1. 농축산부 추진 귀농·귀촌 지원 사업 내용

구 분	사업 내용 및 지원 조건	
귀농 창업 지원	지원내용	농업관련 시설 설치비 지원
	지원조건	총 사업비용의 50% 지원
귀농인 주택 수리비 지원	지원내용	주택을 구입하여 수리하거나, 5년 이상 주택을 임차하여 수리시 소요되는 경비 지원
	지원조건	총 사업비용의 5,000천원 한도 지원 (추가 발생 사업비는 자부담)
귀농인 인턴 지원	지원내용	선도농장에 입주 5개월간 영농체험 및 현장 실습 지원
	지원조건	인턴을 채용한 선도농가에 자금 지원
귀농인 실습 지원	지원내용	영농 기술 습득을 위해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추천하는 관내 선도농가에서 현장 실습을 희망하는 귀농인에 대한 현장 실습비 지원
	지원조건	인턴을 채용한 선도농가에 자금 지원

Table 2. 지자체 귀농인 지원 조례 주요 내용

구 분	내 용
생산소득과 생산기반 사업 지원	농지구입 및 재배에 필요한 시설물, 축산기반시설 설치 및 시설개선, 농축산물 가공처리시설비 지원에 관련한 사항
귀농학교 수강료 지원	군수가 인증하는 귀농학교 졸업자중 영농정착을 인정하는 자에 대해 1인당 30만원 이내에서 지원
집들이 지원	귀농 후 6개월~1년 이내 1가구당 50만원 이내에서 집들이 모임에 필요한 제반경비 지원
주택(빈집) 수리비 지원	주택을 구입하거나 5년 이상 임차하여 수리 등을 할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 (300~500만원 이내, 지자체별 상이)
전입세대 정착금 지원	3년 이상 타 시군구에서 거주 후 1년 이상 해당 지자체에 정착하기 위하여 2인 이상 전입한 세대에 대해 2인 10만원, 3인 20만원, 4인 30만원한도로 전입세대 정착금 지원

Table 3. 민간단체 귀농·귀촌 지원 내용

구분	내용
(사)전국귀농운동본부	생태귀농학교 운영 지자체 MOU 체결, 교육 지역귀농지원센터 지원 귀농동문 책자 발간
(사)전국농업기술자협회	도시민 웰빙농사교육 귀농창업교육 귀농, 귀촌 희망자 상담
천안연암대학 귀농지원센터	귀농 교육 도시민 농업창업 과정 교육

III. 연구 방법

산촌마을에 거주하는 귀농·귀촌인의 정착특성 및 생활환경 만족 요인을 도출하기 위하여 전국 300개의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이 추진된 산촌마을을 대상으로 조사를 수행하였다. 조사 대상 마을의 선정은 각 지자체별 자료 협조를 통해 지역 형평성을 고려한 전국의 귀농·귀촌인이 최소 10명 이상 거주가 확인된 8개 마을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마을은 마을 이장을 통한 사전 협조를 얻은 다음 2013년 2월~9월까지 면대면 직접 방문 설문 조사를 수행하였다(Table 4 참조). 설문은 총 94부가 수행되었으며 유효한 87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설문항목의 구성은 정착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일반 사항, 귀농·귀촌 동기, 귀농·귀촌 생활에 대한 만족 및 갈등, 귀농·귀촌 정책 등 4개 분류 58개 항목으로 구성하여 명목척도 및 등간척도의 5점 리커트척도로 설문하였으며 분석은 IBM사의 SPSS 18 버전을 이용하여 항목별 평균 분석, 상관관계분석, 회기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Table 4. 귀농·귀촌인 설문조사 대상

구분	귀농·귀촌인 설문 결과
경기도 포천 신북면 지동리	9부
강원도 화천군 간동면 유촌리	11부
경상북도 상주시 내서면 노류리	10부
전라북도 장수군 천천면 싹밭들	14부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소호리	10부
경상북도 영상군 수비면 수하리	8부
충청남도 보령시 미산면 도흥리	12부
경상남도 함양군 휴천면 송전리	10부
전라남도 광양시 봉강면 하조리	10부
총 계	94부 (유효 87부)

IV. 분석 결과

1. 응답자 일반 사항

응답자의 일반 사항을 분석한 결과 최연소 응답자는 32세, 최고령 응답자는 87세로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53.3세로 나타났다. 귀농·귀촌 유형에 대한 조사 결과 지역 연고와는 무관하게 이 지역에 귀농·귀촌을 한 사례가 51.7%로 가장 높았고 이 지역 출신으로 도시에 거주 후 귀농·귀촌한 사례가 28.7%를 차지하였으며 타지역 농산촌 출신이 16.1%로 가장 낮은 구성을 보였다. 현재의 거주 산촌마을에 거주한 기간에 대한 분석 결과에서는 5년 이상 거주가 가장 많은 44%를 차지하였으며 2년~3년이 17.9%, 1년 미만이 13.1%, 4년~5년이 11.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귀농·귀촌 이전 3년의 평균 소득과 귀농·귀촌 이후 현재의 평균 소득 비교에서는 귀농·귀촌 이전의 경우 5천만원 이상의 구간이 26.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우상향의 분포 특성을 보였으나 귀농·귀촌 이후에는 1천만원 미만이 27.7%로 가장 많은 좌상향적 분포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Figure 1, 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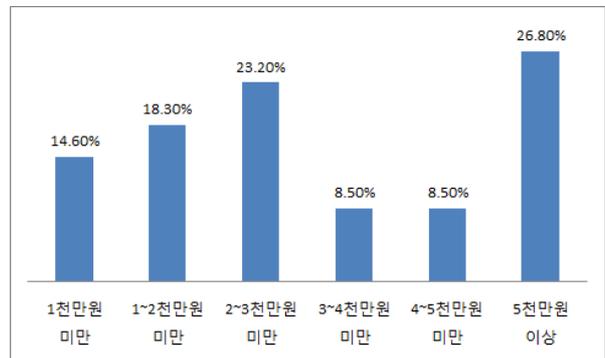


Figure 1. 귀농·귀촌 이전 3년간 연평균 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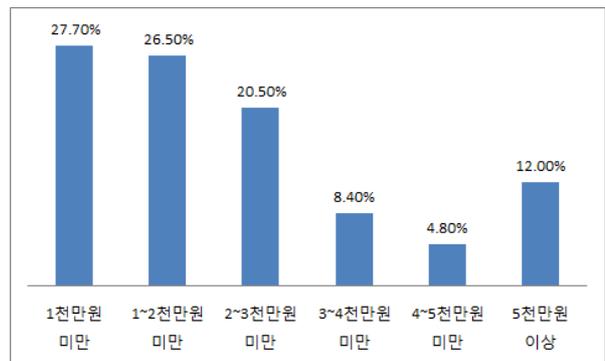


Figure 2. 귀농·귀촌 이후 현재의 연평균 소득

2. 귀농·귀촌 준비 및 동기

선행연구(김철규 등, 2011)에서 조사되었던 설문내용을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 목적하고 있는 귀농·귀촌 준비 및 동기와 관련된 15개 문항과 추가 7개 문항을 추가하여 총 22개의 설문 항목을 구성하였다. 귀농·귀촌 준비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된 5개 요인에 대한 5점 리커트 척도 분석 결과 “마을주민과의 관계”(3.86)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을주민과의 관계”(3.86)가 “주택·토지 등 정착기반”(3.65) 확보 보다 더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는 결과는 주택과 토지 등 정착기반 마련 중심의 정책 뿐만 아니라 귀농·귀촌인을 위한 사전 교육과 마을 주민 관련 교육 등을 통해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간의 심리적 거리감을 저감시킬 수 있는 정책 방안이 우선적으로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Table 5 참조).

산촌마을로의 귀농·귀촌 결심에 결정적 영향을 준 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자신 및 가족건강”(3.97), “생태적 공동체 삶”(3.48), “산촌생태마을 인지”(3.43) 등이 높은 순위를 보였다. 상위 순위를 살펴보면 산촌마을로의 귀농·귀촌 결심에 자연 환경의 영향이 상당히 높게 작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향후 산촌마을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서는 산촌의 생태적 환경의 보전·관리가 귀농·귀촌인 유입에 가장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며 산촌마을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를 활용하는 마케팅 전략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Table 6 참조).

귀농·귀촌을 위한 준비 기간은 3년 이상(26%)이 가장 많았으며 6개월~1년(25%), 6개월 미만(21%) 순으로 나타나 3년 이상의 준비를 통한 귀농·귀촌 유형과 1년 미만의 준비를 통한 귀농·귀촌 유형으로 양극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귀농·귀촌에 대한 정보 취득 경로는 주변의 지인들을 통한 정보 취득이 53%, 인터넷 정보를 통해 얻는 경우가 23%로 높은 순으로 나타났으며 지자체의 직접홍보에 의한 정보취득은 3%로 가장 낮았다. 귀농·귀촌 관련 기관에서 귀농·귀촌에 대한 다양한 홍보 전략과 지자체별 상담창구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효과는 아직까지 미미한 상황으로 분석되었고 귀농·귀촌 준비과정에서 산림청의 산촌생태마을사업이 추진된 사실에 대해 매우 잘 알거나 잘 알고 있는 응답자가 42% 수준으로 전혀 모르거나 모르는 응답자 19%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산촌생태마을에 정착에 정부 마을개발사업이 일정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Table 7 참조).

Table 5. 귀농·귀촌 준비에 중요하게 고려된 사항

순위	구분	응답 평균	표준 편차
1	마을주민과의 관계	3.86	0.8699
2	주택·토지 등 정착기반	3.65	1.2812
3	삶에 대한 가치 철학	3.63	1.0408
4	주변사람들의 지지	3.21	1.2186
5	영농경영 기술경험	2.67	1.0894
전체 평균		3.40	

Table 6. 귀농·귀촌 결심에 결정적 영향을 준 요인

순위	구분	응답 평균	평가 결과(점수)
1	자신 및 가족건강	3.97	
2	생태적 공동체 삶	3.48	
3	산촌생태마을 인지	3.43	
4	전원생활·농촌생활	3.37	
5	은퇴 후 여가생활	3.36	
6	가족결정	2.99	
7	지역에 개인역량 기여	2.94	
8	농업·농촌관련 일	2.77	
9	정부 지원사업 여부	2.74	
10	생활비절감	2.63	
11	가족친지와 근접거리 거주	2.52	
12	향후투자가치	2.31	
13	자녀 교육	2.24	
14	집안가업 지속	2.08	
전체 평균		2.92	0 05 10 15 20 25 30 35 40

Table 7. 귀농·귀촌 준비 및 동기

조사 내용	응답 결과(%)	
	구분	비율
귀농·귀촌 준비기간	6개월 미만	21%
	6개월~1년	25%
	1년~2년	12%
	2년~3년	16%
	3년 이상	26%
귀농·귀촌 정보 취득 경로	서적과 매스컴	8%
	인터넷 정보	23%
	귀농귀촌정보센터(상담창구)	13%
	지자체의 직접 홍보	3%
	주변 지인	53%
산촌생태 마을 사업추진 인지	전혀 모른다	6%
	모른다	13%
	보통이다	20%
	잘 안다	24%
	매우 잘 안다	18%

3. 귀농·귀촌 생활에 대한 만족 및 갈등

산촌생활에 대한 만족에 관련된 5개 항목의 5점 리커드척도 응답 결과 분석을 통해 특징을 살펴본 결과 귀농·귀촌 생활에 대한 만족의 전체 평균은 3.51점으로 전반적으로 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귀농·귀촌 후 산촌마을에 정착하여 생활하면서 만족을 느끼는 항목은 “같이 생활하는 가족과의 관계”가 3.98점으로 가장 높게 나왔고 “신체적 건강의 변화”가 3.73점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경제활동에 의한 소득은 2.94점으로 유일하게 3점 이하의 응답을 보이며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이 결과는 귀농·귀촌 후 산촌마을에 정착하여 생활하는데 있어 소득기반에 대한 열악함이 생활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Table 8 참조).

Table 8. 귀농·귀촌 생활에 대한 만족

순위	구분	응답 평균	평가 결과(점수)
1	같이 생활하는 가족과의 관계	3.98	
2	신체적 건강의 변화	3.73	
3	마을주민과의 관계	3.76	
4	생활환경에 대한 편의	3.14	
5	경제활동에 의한 소득	2.94	
전체 평균		3.51	0 05 10 15 20 25 30 35 40

“귀농·귀촌 이후 생활 전반”의 만족과 상관관계가 있는 요인들을 살펴보기 위해 상관관계분석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관계 분석 결과 “신체적 건강의 변화”가 0.05 유의수준 하에서 상관계수 0.544로 가장 높은 상관성을 보였으며 “같이 생활하는 가족과의 관계”가 유의확률 0.05 수준에서 상관계수 0.424로 두 번째로 높은

상관성을 보였다. “경제활동에 의한 소득”은 유의확률 0.05 수준에서 상관계수 0.400으로 세 번째로 높은 상관성을 보였으며 “마을주민과의 관계” 항목이 유의확률 0.01 수준에서 상관계수 0.251로 가장 낮은 상관성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Table 9 참조).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귀농·귀촌 이후 생활 전반”의 만족에 가장 큰 상관성을 보이고 있는 요인인 “신체적 건강의 변화” 항목은 귀농·귀촌의 결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자신 및 가족 건강”의 항목이 실제 귀농·귀촌 후 정착하여 산촌마을에서 생활하는데 있어 상당부분 현실적 만족감과 직결될 만큼 변화가 되고 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귀농·귀촌 이후 생활 전반 만족을 종속 변수로 하고 생활에 있어 나타나는 5가지 변화요인을 독립변수로 한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회귀분석 모형의 적합성은 F 검증과 결정계수(R²)로 검증하여 추정된 회귀모형의 적합성을 확인하였다. 추정된 회귀모형의 적합성을 평가한 결과, F값이 16.274(p<0.000)로 나타나 유의성이 높은 것으로 판명되었다. 또한 결정계수(R²)의 값이 0.507로 전체변량의 약 51% 정도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 증감에 따른 종속변수의 값을 알 수 있는 베타 값은 ‘마을주민과의 관계’를 제외한 독립 변수들이 정(+)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의 영향력은 “신체적 건강의 변화”가 0.483, “경제활동에 의한 소득”이 0.319 등으로 높은 설명력을 보여주었다(Table 10 참조).

귀농·귀촌인이 마을에 정착하여 생활하면서 발생하는 갈등 대상에 대한 설문 결과 47%는 갈등 대상이 없는 것으로 응답하였고 마을 주민과의 갈등이 24.4%로 가장 많은 것으로 응답되었다(Table 11 참조).

갈등 요인을 살펴본 결과에서는 “귀농·귀촌인에 대한 선입견과 텃세”(24.4%)가 가장 큰 갈등요인으로 응답되었으며 “지역사회와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19.5%), “마

Table 9. 귀농·귀촌 이후 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구분	평균	표준 편차	귀농·귀촌 생활에 대한 만족 및 갈등					
			1	2	3	4	5	6
1. 경제활동에 의한 소득	2.9412	.90439	1.00					
2. 마을주민과의 관계	3.7059	.65144	.172	1.00				
3. 같이 생활하는 가족과의 관계	3.9765	.87255	.089	.239*	1.00			
4. 생활환경에 대한 편의	3.1412	.95310	.162	.394**	.290**	1.00		
5. 신체적 건강의 변화	3.7294	.76202	.028	.245*	.366**	.152	1.00	
6. 귀농·귀촌 이후 생활 전반	3.8118	.82367	.400**	.251*	.424**	.322**	.544**	1.00

* 상관계수는 0.01수준(양쪽)에서 유의. ** 상관계수는 0.05수준(양쪽)에서 유의.

Table 10. 귀농·귀촌 이후 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의 회귀분석 결과

종속 변수	독립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값	유의확률	공차한계
		B	표준오차	베타			
귀농·귀촌 이후 생활 전반 만족	상수	0.058	0.489	-	0.118	0.906	
	경제활동에 의한 소득	0.319	0.073	0.350	4.345	0.000*	0.958
	마을주민과의 관계	-0.032	0.112	-0.025	-0.284	0.777	0.793
	같이 생활하는 가족과의 관계	0.181	0.083	0.191	2.173	0.033**	0.083
	생활환경에 대한 편의	0.132	0.076	0.152	1.722	0.089	0.797
	신체적 건강의 변화	0.483	0.093	0.447	5.181	0.000*	0.838
R=0.712, R ² =0.507, 수정된 R ² =0.476, F=16.274 p=0.000, Durbin-Watson=1.964							

*.p<0.01, **.p<0.05

을 비전 및 운영방식의 차이”(13.4%)순으로 응답되었다 (Table 12 참조).

귀농·귀촌의 성공을 위한 요인에 대한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42.7%가 “지역주민과의 원만한 관계 형성”을 42.7%로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안정적 소득원 확보”가 29.3%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3 참조).

귀농·귀촌 이후 산촌마을에 정착하여 생활하는데 있어 선행연구들(농촌진흥청, 1999; 고성준, 2008)에서 제시되어 왔던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갈등 대상과 갈등 요인이 지역 주민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한 귀농·귀촌 성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지역주민과의 원만한 관계로 응답하고 있는 결과는 10년 이상 지속되어 오고 있어 여전히 최우선적인 갈등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결과를 볼 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득창출과 정착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적 지원은 실질적인 귀농·귀촌인들의 갈등 원인을 해결하는 부분에서는 한계가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산촌 마을 뿐만 아니라 귀농·귀촌 정책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갈등 요인을 해결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접근방식에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11. 귀농·귀촌인 갈등 대상

순위	구분	응답 평균	평가 결과(%)
1	없음	47.0%	47.0
2	마을 주민	24.4%	24.4
3	마을 지도자	19.5%	19.5
4	공무원	13.4%	13.4
5	영농조합법인(작목반)	8.5%	8.5
6	귀농·귀촌인	4.9%	4.9
전체 평균		100%	100

Table 12. 귀농·귀촌인 갈등 요인

순위	구분	응답 평균	평가 결과(%)
1	없음	24.4%	24.4
2	귀농·귀촌인에 대한 선입견과 텃세	24.4%	24.4
3	지역사회와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	19.5%	19.5
4	마을 비전 및 운영방식의 차이	13.4%	13.4
5	집이나 땅 문제와 재산권 침해	8.5%	8.5
6	영농방식의 차이	4.9%	4.9
7	마을일이나 모임 참여	3.7%	3.7
8	도시적 생활방식 고수	1.2%	1.2
전체 평균		100%	100

Table 13. 귀농·귀촌 성공을 위한 우선 순위

순위	구분	응답 평균	평가 결과(%)
1	지역주민과의 원만한 관계	42.7%	42.7
2	안정적 소득원 확보	29.3%	29.3
3	주택과 농지 등 생활기반 마련	13.4%	13.4
4	가족과의 원만한 관계	7.3%	7.3
5	교육 여건	4.9%	4.9
6	정부의 지원 정책	1.2%	1.2
7	귀농·귀촌 교육	1.2%	1.2
전체 평균		100%	100

4. 귀농·귀촌 정책 요구

귀농·귀촌에 대한 정책 요구에 대한 설문분석 결과 “임업(농업) 소득 관련 교육 시스템 제공”에 대한 요구가 4.00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컨설팅 지원”에 대한 요구는 3.92점으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고 “소득 향상을 위한 자금지원 및 일자리”에 대한 요구는 3.88점으로 교육시스템이나 컨설팅 지원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요구도가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귀농·귀촌인의 설문 응답에서 요구사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농업기술 및 농업교육에 대한 시스템 체계 마련과 농촌현실에 대한 사전교육 시스템 요구가 가장 많았으며 공동체 협업 형태의 일자리 및 행사 참여를 위한 공동체 사업에 관련된 정부의 지원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부의 직접적 재정지원이나 일자리 기반의 정책 마련 우선순위보다는 소득 향상을 위한 교육 시스템 마련과 컨설팅을 통해 산촌마을 귀농귀촌인의 역량강화 정책 마련이 우선적으로 필요함을 알 수 있다(Table 14 참조).

Table 14. 귀농·귀촌 정책 요구

순위	구분	응답 평균	평가 결과(점수)
1	소득 관련 교육시스템	4.00	
2	정착 관련 컨설팅	3.92	
3	자금지원 및 일자리	3.88	
4	귀농·귀촌 홍보	3.61	
전체 평균		3.85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산촌마을에 정착한 귀농·귀촌인의 정착 특성을 파악하고 귀농·귀촌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귀농·귀촌 동기, 귀농·귀촌 생활에 대한 만족 및 갈등, 귀농·귀촌 정책 등에 대한 요인을 찾기 위한 목적에서 수행되었다. 연구에서 제시된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에 제시된 여섯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귀농·귀촌의 준비과정에서 “마을주민과의 관계”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귀농·귀촌인의 지역사회 참여와 관련하여 여가활동 및 공동 경제활동 참여의 저조함은 지역사회와의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귀농·귀촌인들을 대상으로 사전 소양교육과 산촌마을 주민 교육을 통해 심리적 거리감을 저감시킬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주택·토지 등 정착기반” 등의 어려움은 산촌이

라는 환경의 입지적 제약 요건이 귀농·귀촌인의 심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빈집정비나 산지은행 등과 연계하여 제도적으로 정착의 안정화를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산촌에 정착한 귀농·귀촌인들의 이주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자연환경 조건”은 산촌마을로의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핵심적 관리 대상으로 이를 활용하는 귀농·귀촌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귀농·귀촌 후의 생활에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이는 “경제활동에 의한 소득”을 개선하기 위해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체험휴양마을 사업 등 정부 부처의 지원사업과 정착한 귀농·귀촌인과 연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 육성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귀농·귀촌 이후 생활의 만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신체적 건강의 변화”의 강화를 위해 산림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산림치유 사업을 마을에 접목하여 육성하는 방안이 농어촌마을과 차별화되는 산촌마을의 마케팅 전략으로 효과를 거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섯째, 산촌마을에 거주하는 귀농·귀촌민의 정책 요구에서 “소득 향상을 위한 자금지원 및 일자리 창출”이라는 현재의 지원정책 방향보다 “임업(농업) 소득 관련 교육 시스템 제공”, “컨설팅 지원”등의 우선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결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산촌마을의 특성에 부합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귀농·귀촌인 교육 시스템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 산촌마을은 농촌마을보다 노령화 속도가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서정원 등, 2010). 산림청을 중심으로 다양한 산촌마을 지원 정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노령화를 개선할 수 있는 뚜렷한 정책은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고 산촌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산촌생태마을은 운영·관리를 위한 인력의 부재로 뚜렷한 개선을 내 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귀농·귀촌인을 꾸준히 산촌마을로 유치하고 귀농·귀촌인을 활용한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는 산촌마을에 귀농·귀촌하여 정착하고 있는 귀산촌인들의 특징과 요구를 통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하는 시기에 직면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산촌마을에 정착한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귀농·귀촌인 정착 동기, 생활만족요인, 정책 요구 등을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현재의 귀농·귀촌 정책이 1990년대부터 꾸준히 진행해온 영농진흥을 위한 정책의 흐름에서 변화되고 있지 않다. 본 연구를 통해 살펴본 산촌지역에 귀

농·귀촌하여 정주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삶의 질에 대한 가치를 비도시화된 지역에서 찾고자 하는 경향을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귀농·귀촌 전반에 대한 정책이 이제는 영농진흥 위주보다는 지속가능한 정착을 위한 정착 환경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교육·컨설팅에 보다 집중된 방향에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정착에 성공한 귀농·귀촌인만을 연구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패하는 원인에 대한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귀농·귀촌을 준비하고 있는 도시민들에 대한 연구가 수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광범위한 내용에서의 결과물 제시에는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를 기초로 귀농·귀촌 의향이 있는 도시민들과의 의식 비교 분석을 통해 산촌마을의 귀농·귀촌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보다 구체적으로 규명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1) 일본은 일찍부터 도시민의 농어촌 정주 흐름이 형성되어 관련 정책을 시행하였다. 일본의 베이비붐은 2차 대전 직후인 1947년부터 1949년 사이에 시작되어 이때 태어난 ‘단카이(團塊)세대’의 은퇴시기가 우리보다 앞서 맞이했다.

참고문헌

1. 강대구, 2006, 귀농자의 귀농유형별 영농정착과정, 순천대학교 인적자원개발, 38(2), 23~53.
2. 구본석, 1999, 귀농자의 영농정착 만족도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산업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 고성준, 2008, 귀농자의 실태와 안정적 정착을 위한 연구 - 전라북도 귀농자를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4. 김철규, 이해진, 김기홍, 박민수, 2011, 귀농귀촌인의 성공적 정착과 농촌사회 발전 방안 연구, 농림식품수산부.
5. 농림식품수산부, 2009, 귀농·귀촌 종합 대책.
6. 농촌진흥청, 1999, 농업인후계자·전업농가 경영실태 조사보고서.
7. 박공주, 윤순덕, 강경하, 2006, 은퇴 후 귀농인의 농촌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농촌계획, 12(4), 63-76.
8. 박은경, 2008, 귀농인 이주만족도 조사연구 - 영월지역 은퇴 후 귀농인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9. 서규선, 변재면, 2000, U턴 귀농자 장·단기 교육프로그램 개발, 한국농촌지도학회지, 7(1), 137~153.
10. 서정원, 전준현, 박찬우, 2010, 산촌생태마을 도농교류 활성화 및 운영프로그램 개발, 국립산림과학원.
11. 오수호, 2013, 귀농·귀촌 가구의 이주, 정착 특성과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2. 우종현, 1997, 귀향농가의 발생원인과 적응과정, 한국지리학회지, 3(1), 99~113.
13. 유정규, 1998, 귀농의 현황과 정책과제, 도시와 빈곤, 34, 23-41.
14. 이상호, 2008, 경북지역 귀농인의 지역 및 지역주민과의 만족도 분석, 농업경영·정책연구, 35(3), 551~565.
15. 이재민, 2012, 귀농인의 산촌지역 적응양상 - 김천시 부항면 해인동의 사례,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6. 이재철, 이도선, 2006, 지역밀착형 귀농인력개발 및 활용방안, 대구경북연구원.
17. 조창완, 김희승, 서정원, 2007, 전남지역 밀착형 귀농인력 개발 및 활용방안, 전남발전연구원.

접 수 일: (2014년 2월 12일)

수 정 일: (1차: 2014년 2월 25일, 2차: 2014년 3월 12일)

게재확정일: (2014년 3월 12일)

■ 3인 익명 심사필